

轉換期에 처한 韓國經濟學의 課題

朱 宗 桓*

<目 次>

- I. 머리말
- II. 韓國經濟學의 발자취와 現況
- III. 韓國의 經濟現實과 新古典派經濟學의 限界性
- IV. 韓國의 經濟現實과 Marx經濟學의 問題點
- V. 韓國經濟學의 課題

I. 머리말

우리는 8·15해방 이후 줄곧 轉換期の 연속선상에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우리는 계속 「轉換期」라는 말을 즐겨 써왔다. 사실 우리는 해가 바뀔 때마다 그것을 轉換期라고 생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환기라는 말에 약간 식상해 있는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1990年代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韓國의 轉換期的 樣相은 종전의 이른바 「轉換期」와는 매우 다른 內容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전환기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것 같다.

우리가 직면해 있는 90年代의 전환기는 종전의 그것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첫째로 종전의 이른바 전환기가 주로 國內情勢의 변화를 主軸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90년대의 전환기는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國際情勢의 變化를 主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根本的으로 그 모습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전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를 提唱하고 나섰을 때, 國際情勢가 오늘과 같은 狀況으로 귀결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것은 기껏해야 소련 共產主義體制內의 微調整에 불과하리라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관측자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그러나 그것은 날을 거둬할수록

* 東國大學校 農業經濟學科

소련식 共產主義體制의 本質的 修正 내지 소련식 共產主義體制의 포기와 資本主義로의 일대 접근을 의미하는 것임이 점차 분명해져 가고 있다. 그것은 바르샤바체제의 붕괴를 가져오고, 1990년에는 급기야 바르샤바체제의 NATO체제로의 사실상의 흡수통합이나 다름없는 유럽안보協力會議(CSCE)에 의한 파리宣言의 채택을 가져왔다. 이로써 東西冷戰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東西協助體制가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미국식 資本主義와 소련식 共產主義는 對決의 시대로부터 共存의 시대로 일대 전환을 이룩하였다. 그것을 상징한 것은 美·蘇·英·佛 등 제2차 세계대전의 戰勝國들의 합의 하에 성취된 東西독일의 統一이었으며, 그것에 뒤이어 실현된 전기한 유럽안보協力會議였다.

둘째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90년대의 전환기를 특징지우고 있는 것은 소련식 共產主義體制의 상대적 몰락과 西歐資本主義體制의 상대적 안정이라고 할 수 있다. 50년대로부터 60년대초에 걸쳐, 소련과 그 위성국의 經濟成長은 資本主義經濟圈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전자가 후자를 따라잡게 되는 날은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예컨대 1955년에 발표된 論文에서 著名한 英國의 Marxist인 M. Dobb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철·석탄·전력 등의 분야에서 소련의 생산량은 50년대의 후반기중에 西유럽의 그것을 능가할 것이며, 60년대 전반기중에 美國의 그것을 능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생산량의 절대치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다. 만일 人口 1人當 생산량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소련은 西유럽보다 1~2年 앞서 있으며, 미국에 비해 몇 년 뒤져 있다.”¹⁾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Stalin體制가 英國을 포함한 다른 모든 나라들이 본받아야 할 政策目標여야만 한다고 줄곧 믿어왔다.²⁾ 그러나 그의 믿음은 1990년의 소련·동구권의 몰락이라는 現實 앞에 산산조각이 났다. 물론 西歐資本主義도 계속 휘청거리고 있다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西歐資本主義가 Stalin式 소련社會主義보다는 상대적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당면한 經濟危機의 타개책으로 美國을 비롯한 이른바 「經濟的 帝國主義」의 종주국들에게 經濟援助를 간절히 애걸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오랜 혈맹이었던 北韓의 맹렬한 반대와 비난을 무릅쓰면서까지 韓國에 대하여 國交樹立을 대가로 하여 經

1) Dobb (1955, pp. 128~9), Hutchison (1981, p. 85).

2) Ibid, p. 87.

濟援助를 구걸하고 있는 현실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소련은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의 깃발 아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개혁하고, 시장경제체제의 도입·대외무역의 개방화·토지의 사유화의 인정·法治主義와 自由選舉 아래서의 多黨制의 모색 등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이 되어 온 거의 모든 장치들을 갖추어가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듯하다. 이 과정에서 점차 분명해지고 있는 것은 소련의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가 오랫동안 인류의 理想으로 여겨져왔고 K. Marx가 科學的 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제시했던 共產主義로의 過渡期에 필연적으로 겪을 수 밖에 없는 경제체제라기보다는 생산수단의 國有化 아래서의 「官僚資本主義」이외의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서는 共產主義는 공산당관료들이 표면에 내건 羊頭에 불과했으며, 생산수단의 주인이어야 할 근로인민대중의 參與民主主義는 排除되고, Marx가 그의 『資本論』에서 배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人間疏外의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는 커녕 一黨獨裁體制下的 관료적 지배에 의해 더욱 악화의 길을 걸어왔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소련과 동구권에서 進行되어온 80年代末에서 90년에 걸치는 일련의 政治的 대변혁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共產主義的 인간개조와 근로대중의 자발적 참여없는 共產主義體制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여실히 판명되었다.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는 진정한 共產主義的 改革의 길로 나갈 것을 포기함으로써, 공산주의사회의 실현을 위해 身命을 바쳐온 수백만의 영혼들을 배반하고,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이른바 「經濟的 帝國主義」의 宗主國과 그 지지자들에게 勝利感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이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가 결코 共產主義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그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 같고, 기껏해야 사회주의의 외투를 입혀 놓은 자본주의 내지는 「社會主義的 資本主義」이상의 것은 아닌 것 같다. 소련식의 社會主義的 資本主義는 西方의 國家獨占資本主義에 의한 상품·화폐경제의 공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것이다.

셋째의 轉換期的 樣相은 위와 같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좌절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할만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냉큼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전환기의 본질적 특성은 사람들의 思考方式의 轉換, 좀 어려운 말로 말한다면, 「파라다임」의 轉換에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라면, 새로운 「파라다임」은 아직도 過渡期的 상황에서 제자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있

다. 혹자는 資本主義的 이데올로기를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제시할지 모르지만, 오늘날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國家獨占資本主義體制가 社會主義的 要素들을 자기체제 안에 대폭 수용함으로써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마당에, 資本主義的 이데올로기가 새로운 「파라다임」으로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소련식 사회주의도 아니고 서구식 국가독점자본주의도 아닌 새로운 「파라다임」을 創出해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끝으로 위와 같은 급변하는 國際的 狀況은 국내적으로도 심각한 轉換期的 樣相을 가져왔다. 소련·東歐圈과 修交하는 마당에 그들의 國是로 되어 왔던 Marx-Lenin주의를 反共의 이름 아래 무조건 혹독한 보안법적 규제대상으로 禁斷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원래 우리의 國是는 自由民主主義였고 反共은 그 수단에 불과했다. 그런데 오랜 冷戰과 남북대결의 시대를 거치오면서 어느덧 反共이 國是가 되고 自由民主主義는 그 수단으로 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게 되었다. 일부 케변론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면서 폭력혁명을 주장하는 선동은 규제되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本質을 왜곡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本質的 特性은 자유민주주의를 反對하거나 그것을 전복하려는 언동이라 하여도 그것이 實定法을 어기는 폭력으로까지 승화되지 않는 한,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점에 자유민주주의의 強點이 內在하고 있다. 자기의 體制內에 體制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자유로운 활동마저도 法的으로 보장함으로써 體制의 活力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전세계에 걸쳐 세력을 확대하게 된 根本原因으로 되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사상과 공산주의적 정치집단을 비롯한 모든 反體制的 要素들을 체제 내에 수용하지 못하고, 공공연한 탄압의 대상으로 삼는 체제는 결코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것은 다름 아닌 獨裁體制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25동란 이후의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國是인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反共을 國是로 삼는 가운데, 우익테러집단을 國家的으로 비호하면서 조금이라도 공산주의에 유화적인 언동이 나타나면 이것을 容共으로 몰아부쳐 탄압해왔다. 공산독재체제가 그것이 내재하는 官僚制的 취약성 때문에 줄을 이어 무너져가고 있는 거대한 역사의 전환점에서, 명색이 自由民主主義를 표

방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獨裁體制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양두구육적인 사이비 自由民主主義를 고수해왔다는 것은 시대착오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독재와 자유민주주의의 平和共存을 前提로 한 평화적 경쟁의 時代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1991年 봄 國會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保安法 改正을 비롯한 일련의 民主化 立法들은 우리가 바로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각명하게 상징하는 것으로 될 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 우리는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심각한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학문연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自由民主主義의 기본이 되는 자유의 보장이 앞으로 한국에서의 經濟學의 發展에 초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강조해두고 싶다.

II. 韓國經濟學의 발자취와 現況

돌이켜 보면, 韓國의 경제학은 해방 후 45年間に 장족의 발전을 이룩하였다.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수많은 경제학 교수들이 있고, 경제학 박사만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매년 쏟아져 나오는 논문만도 엄청나게 많다.

8·15해방 전의 한국의 경제학은 주로 日本을 거쳐 간접적으로 수입되었으므로, 日本經濟學界의 동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당시 日本의 경제학계는 자유주의와 保護主義로 크게 양분되어 있었으며, 古典學派·歷史學派·純粹經濟學·마르크스經濟學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다. 그 가운데서도 歷史學派의 영향을 받은 社會改良主義와 마르크스주의가 맞서 있었다. 日本學界의 그와 같은 동향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非마르크스경제학과 마르크스경제학으로 양분되어 對立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제의 지배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일제에 대한 저항과 國權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였으므로, 現狀容認의인 非마르크스경제학보다는 現狀打破的인 마르크스경제학 쪽이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체로 마르크스경제학이 학계와 경제평론계를 지배하고 있었다. 이런 사정은 해방후의 左右派 對立의 혼란기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6·25동란으로 左派經濟學이 발붙일 곳을 잃게 되자, 한국의 경제학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1950년 전반에는 先進資本主義 여러 나라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해 가고 있었던 케인즈경제학이 본격적으로

소개됨과 아울러, 古典派經濟學의 고전들이 번역되었다. 1950년대 후반 이후에는 케인즈경제학의 長期動態理論・後進國開發理論・新古典派理論・計量經濟學・經濟計劃論 등이 도입되었다.³⁾

1960년대에 한국의 經濟學界에는 새로운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특히 美國留學生들이 속속 귀국하여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자, 당시 미국을 휩쓸고 있었던 Samuelson의 新新古典派(neo-neo-classicals)가 도입되어 점차 한국 경제학계의 지배적인 자리를 굳혀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60년대 후반에 新新古典派의 세례를 받은 미국대학 출신 경제학자들이 경제행정의 責任者로 등용되기 시작하고, 행정부가 이들의 영향 하에 들어가게 되자, 新新古典派經濟學은 더욱더 지배적인 자리를 굳혀가게 되었다. 이런 상황 아래서 歷史學派의 흐름을 이어받은 制度學派나 體制批判的인 마르크스경제학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났다. 특히 마르크스경제학은 매카시즘의 회오리바람에 견디지 못해 더욱더 숨을 죽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마르크스경제학자로 지목받은 학자는 대학강단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

70년대의 전반까지 新新古典派의 支配的 상황은 계속되었지만, 70년대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과 거기에 뒤이은 전세계적인 경기후퇴, Stagflation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新新古典派는 미국 국내에서 우선 호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Lester C. Thurow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에게 경제학의 황금시대는 1960년대 초반의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다.(中略) 그러나 1970년대에 경제파탄이 들이닥치면서 경제학자들은 경제사태를 수습하는 힘을 잃은 것으로 보였다.(中略) 비교적 짧은 기간에, 케인즈의 분석과 그 종사자들은… 경제적 실패의 원인으로 규탄을 받는 처지로 전락했다.”⁴⁾

미국 국내에서의 위와 같은 新新古典派 경제학의 실패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그칠 수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한 비판과 반성은 이미 1971년에 英國 케임브리지學派의 Joan Robinson여사가 美國經濟學會에서 행한 강연「經濟學의 第2의 危機」에⁵⁾ 언급되어 미국경제학계에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

3) 李基俊 (1980, 序文).

4) Thurow (柳東吉 譯, 1986, pp. 59~60).

5) Robinson (1972).

었다. 그녀는 일찌기 Keynes에 의해 촉발되었던 경제학의 제1의 위기가 채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新古典學派의 제2의 위기가 닥쳐왔다고 보았다. 즉 P. Samuelson이나 J. Hicks 등으로 대표되는 現代의 주류경제학은 당면한 경제의 기본문제인 失業・貧困・公害・所得의 不均等 등 어느 하나에도 解決策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그녀는 비판하였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극언하였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經濟理論이 분명히 破産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Joan Robinson의 批判은 1980년에 미국의 D. Bell에 의한 다음과 같은 말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우리는 新古典派經濟學의 기초적 공준에 대하여 선험적 의문을 가지고 있다. — 그것은 競爭均衡의 모형에 관해서나 개인이나 기업 또는 정부가 취하는 行動基準 등에 관한 가정이다. 요컨대 경제이론에 있어서의 위기뿐만 아니라, 理論 그 자체의 위기에 관한 의문이다.”⁶⁾

신고전파경제학이 韓國現實의 經濟問題를 해결하는 데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1970年代의 後半부터 시작되었다. 이 점을 잘 요약해 놓은 책은 韓國經濟研究院 編『韓國經濟學의 模索』(1983)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主要論文들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趙容範, “韓國經濟學의 狀況과 問題,” 1974

金俊輔, “經濟成長과 經濟學의 反省,” 1979

朱宗桓, “現代經濟學의 危機와 韓國經濟學,” 1981

姜命圭, “韓國經濟學의 批判的 省察,” 1981

邊衡尹, “韓國經濟學의 展開過程,” 1982

(1983年 이후의 것은 생략한다.)

미국적 신고전파경제학에 대한 批判은 1980년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고, 그 과정을 통하여 그것이 갖는 문제점들이 많이 밝혀져 왔다. 新古典派經濟學도 Hayek의 新自由主義經濟學, M. Friedman의 Monetarism, R.E. Lucas, T. Sargent 등에 의한 合理的 期待理論 등으로 내부적인 보수작업을 진행시켜 왔지만, 신고전파이론이 가지는 기본적 制約性에서 탈피하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neo-Keynesians, Radical Economics, Neo-Marxists, neo-Ricardians 등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이 이론들은 마르크스

6) Bell and Kristol (1981).

경제학을 일부 도입하는 가운데 正統派經濟學의 시야를 점차 넓혀가면서, 전자를 경제학체계에 대폭 수용하려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현실의 경제문제 해결에 있어서 新古典派經濟學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경제의 歷史性과 階級性을 중시하는 가운데, 자본주의사회에서의 人間疏外問題의 극복의 길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공통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어느 하나의 學派에 편협하게 집착하느니보다, 경제학의 역사 속에서 現實의 經濟問題를 해결하는 데 유용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理論들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이는 방향에서 경제학의 危機를 극복하는 길을 찾아보려고 하는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생각된다.⁷⁾ 그것들은 대부분 Marx경제학의 영향 아래서 진행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좋은 예가 Joan Robinson이나 M. Morishima 등의 일련의 노작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의 經濟學界에 있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종전의 軍事獨裁정권이 물러나고, 사상계에도 自由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마르크스경제학은 특히 젊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부활되어, 학계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여러 개의 分派로 갈라져 있는 듯이 보인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正統을 고수하려는 일파가 있는가 하면, 그것과 신고전파경제학과의 접목을 시도하려는 일파가 있고, 신고전파경제학을 고수하는 가운데, 마르크스경제학에 대하여 관심조차 갖지 않으려는 일파도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蘇聯, 東歐圈이 經濟的으로 빈사상태에 빠져들자, 그것을 社會主義·共產主義에 대한 資本主義의 勝利라고 보고 마르크스경제학의 종언을 운운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문제는 학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의 경제학의 遺産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韓國의 現實經濟問題를 올바르게 해결하는 데 유용한 理論的 무기를 찾아내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무기는 단편적 지식의 짜집기에 의해서는 결코 마련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人間本性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경제사회의 運動法則을 수미일관된 理論에 의하여 분석해 냄으로써 국민에게 복된 經濟生活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밝혀주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다음에서는 현재 韓國經濟學界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

7) 이 점에 관해서는 金俊輔(1986) 참조.

지하고 있는 新古典派經濟學이 과연 그와 같은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가를 우선 검토하고, 다음으로 이에 대한 批判者 내지 對立者의 입장에 있는 마르크스경제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검토하고, 끝으로 韓國經濟學의 앞으로의 方向을 간략히 제시함으로써 글을 맺고자 한다.

III. 韓國의 經濟現實과 新古典派經濟學의 限界性

韓國經濟에 관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일부 소수의 血族財閥으로의 경제력의 集中과 이에 따른 소득분배의 兩極化現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일부 소수의 경제학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경제학자의 見解가 일치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일부 소수의 血族財閥들은 4·19, 5·16, 5·17 등 여러 차례의 정치적 격동기마다 不正蓄財者로 단죄될 뻔 했으나, 그때마다 교묘히 政治權力과 야합하여 빈번히 보다 큰 이권을 차지하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더욱 비대화할 수 있었다. 마르크스경제학이 이를 國家獨占資本主義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에 대해 新古典派經濟學派에 속하는 한국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利潤追求의 자유는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財閥에 대한 정부간섭은 되도록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들의 이와같은 주장은 完全競爭을 전제로 한 自由市場經濟에 있어서는 생산자는 極大利潤을 추구하고, 소비자는 極大滿足을 실현하도록 소비지출을 배분하게 될 것이므로,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인도되어, 사회적 복지의 極大化, 즉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이 실현될 것이라는 신고전파경제학의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 그것은 Adam Smith의 自由放任主義 經濟思想과 夜警國家論을 그대로 현대에 옮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그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그것은 自由放任主義의 철저한 주장자였던 신고전학파의 조상들 자신이 바로 獨占에 대한 철저한 비판자였다는 사실이다.

애당초 Adam Smith는 重商主義的 政府干涉主義와 독점을 배격하고 영업의 자유를 確立해야만 국민이 富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國富論』을 썼다. 그것은 自由競爭市場의 원리가 최상의 것임을 주장하려는 것이었고, 독점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A. Smith의 경제학을 이어받은

영국의 고전경제학은 이러한 A. Smith를 계승하여 독점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신고전과 경제학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던 영국의 L. Robbins는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고전학파의 思想을 관찰하는 정신은 독점에 대한 反對였다”고 말하고 있다.⁸⁾

신고전학파의 創始者인 Leon Walras도 獨占의 반대자였다. 그는 「조건의 평등과 지위의 불평등」을 주장하였고 그러한 입장에서 인간의 노력에 의해 창조되지 않은 자연자원이나 토지를 어떤 사람이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正義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보았다. 그는 그러한 입장에서 土地의 國有化를 주장하기도 하였다.⁹⁾ Leon Walras의 一般均衡理論도 토지국유와 독점의 排除를 전제로 해서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은 그 이론이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on Walras의 이론을 조상으로 하여 성립된 新古典派 經濟學을 신봉하는 한국의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의 일부는 한국과 같이 고도로 獨占化된 경제 아래서 완전경쟁을 전제로 할 경우, 이윤추구의 자유가 資源의 最適配分을 가져올 수 있다는 Leon Walras의 이론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한 완전경쟁의 전제조건을 무시한 채, 利潤追求의 自由만을 절대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아니했던 간에 韓國의 前近代의 血族財閥에 의한 국민경제지배를 미화하고 이에 봉사하는 이론과 이데올로기를 안출하고 전파시키고 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곡학아세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의 신고전파경제학자들 가운데 產業組織學會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有效競爭이 자원의 최적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국의 血族財閥의 행태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한국의 신고전파경제학자라고 해서 모두가 곡학아세로 매도될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들의 연구는 주로 血族財閥들의 행태분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독과점이윤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한국의 政治와 經濟, 나아가서는 社會까지도 얼마만큼 부패시키고 있는가를 구명하는 데까지는 파고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신고전학파의 전반적인 方法論의 限界性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 Robbins (1952).

9) 朱宗桓 (1984a, p. 249).

둘째로 현재 韓國經濟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不動產投機의 만연으로 인한 富의 兩極化現象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간에 新古典學派에 속하는 한국의 유능한 몇몇 학자들에 의해서 실태가 심도있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많은 韓國의 新古典派經濟學者들은 이윤추구의 자유가 허용된 자본주의사회에서 不動產投機가 왜 나쁘냐, 복부인이야말로 가장 合理的인 經濟人이다라는 등 해괴한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에 비하면 격세지감마저 있다. 不動產投機에 대한 반대운동에 앞장서 있는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經實聯)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新古典學派로 지목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학문이 상아탑 속에만 갇혀있지 않고 사회정의의 위해 분투하는 모습은 존경스럽기조차 하다. 다만 문제로 되는 것은 그들의 그러한 정열적 행동이 大學講壇에서 그들이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경제학의 학문체계와 얼마만큼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냐 하는 점이다.

新古典學派의 경제학교과서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산을 合理的으로 운용하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론바 資產選擇理論(portfolio selection)이 설명되어 있고, 地代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식으로 기능론적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地代의 원천이 差額地代의 경우에는 초과이윤에 있고, 絶對地代의 경우에는 土地에 대한 排他的 소유권에 있다는 점은 대개의 경우 설명되어 있지 않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찌하여 地代만이 不勞所得으로 간주되고, 利潤은 不勞所得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는가, 도대체 이윤·이자·지대의 源泉은 어떠한 사회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는가에 관한 설명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限界生産力에 따라 각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가 결정되고 난 후에는 아무런 剩餘價値도 존재할 수 없다고 보는 「오일러의 정리(Euler's theorem)」를 신봉하는 이론체계를 고수하고, 자본주의사회에서 이윤을 포함한 모든 資產所得의 根源이 노동자들의 잉여노동의 결정으로서의 剩餘價値에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신고전파경제학의 기본적 입장이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 특히 土地投機가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지탄 받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주들이 인간노동의 산물이 아닌 자연자원으로서의 토지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토지를 제공하여 지대를 받아가는 이

외에, 토지소유 그 자체에 의해서 異時點間의 時勢差益을 차지함으로써, 생산 활동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가운데 막대한 소득을 사회로부터 橫取해 가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이치를 과학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勞動價值說이 필수불가결하게 되는데 신고전학파에는 價格論은 있어도 제대로 된 價值論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經濟正義에 관한 주장은 경제이론적인 기초를 확고히 다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현하의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우루과이라운드 多者間協商에 따른 시장개방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신고전학파이론은 比較優位論에 입각하여 시장의 完全開放이 국내외적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져옴으로써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같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 왔다. 또 1979년 당시의 經濟企劃院은 이 이론을 현실정책에 도입하여 농축산물수입의 확대에 의해 농산물가격상승을 막고 이로써 임금상승을 막아야만 수출이 잘 된다고 주장하고 막대한 양의 농축산물 특히 대량의 쇠고기와 육우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해 필자는 韓國經濟學會誌에 이에 대한 批判論文을 발표하여¹⁰⁾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政府는 농축산물 수입확대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 결과 한국의 畜産基盤은 크게 붕괴되어 그동안 축산진흥정책에 추종하여 적지않은 투자를 했던 많은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개중에는 비판자살하는 농민마저 줄을 이었다.

이와같은 쓰라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은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 후에도 비교우위론을 무조건 지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第5共和國下에서도 막대한 생우의 도입으로 농민들은 다시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리고 근년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시작되자, 시장개방의 불가피성을 옹호하는 데 앞장서 있는 신고전파경제학자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필자가 전기한 論文에서 분명히 지적한 바 있듯이, 신고전학파의 비교우위론은 완전경쟁·恒時的 완전고용·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의 不在·時間의 不在·생산함수의 1次同次性 등 엄밀한 전제조건 위에 구축된 이론이다. 그러므로 현실경제가 그러한 전제조건들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이 이론의 現實適用性은 크게 제약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전학파경제학

10) 朱宗桓 (1979).

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이론의 전제조건들을 무시하고, 그 結論만을 내세워, 시장개방의 필요성만을 역설해왔다.

國際的 市場開放이 선진국에 대한 경제적 隸屬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自由貿易帝國主義論」¹¹⁾으로부터 라틴아메리카 「從屬理論」, 근자의 Wallerstein一派의 「世界資本主義體制論」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적 축적이 있어왔다. 어떤 의미에서는 Wallerstein일파의 「世界資本主義體制論」은 서방 선진국에 대한 시장개방을 통해 소련과 東歐圈이 하나하나 세계자본주의권으로 포섭되어 붕괴되어 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일찌기 예견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西方先進諸國들의 對共產圈 外交政策의 기본골격은 바로 Wallerstein일파의 世界資本主義體制論에 입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면도 있다.

이와같은 관점은 신고전파경제이론에서는 취급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經濟的 從屬의 개념은 상호의존성의 개념으로 탈바꿈되어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견해는 현존의 세계경제질서의 본질에 애써 눈을 가리고, 그것을 옹호하려는 辯護論의 견해에 불과하다. 이와같은 이론으로써는 民族經濟의 자주성과 자립성을 지켜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넷째로 新古典派經濟學을 韓國의 경제현실에 적용시킴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현실경제가 獨寡占經濟의 지배 하에 있고 그 모순을 완화시키기 위해 독과점규제법 등 각종 정부규제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격이론은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의 전제 그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아 이론을 위한 이론으로 흐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완전경쟁을 前提로 하여 自由市場經濟 아래서의 資源의 最適配分, 즉 Pareto최적의 實現可能性을 논증하고, 이로써 거꾸로 自由市場經濟의 당위성과 우수성을 논증하려고 하지만, 완전경쟁 그 자체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 이론 자체도 비현실적인 것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모순 때문에 신고전학파에서는 微視經濟學과 巨視經濟學을 따로따로 분리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와같은 이원론적 분리는 이론의 整合性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일종의 정신 분열증적 양상마저 띠게 되었고¹²⁾ 微視經濟學에서는 정부규제의 不當性을 논

11) Gallagher and Robinson (1953~4); 朱宗桓(1982).

12) 이 점에 관한 指摘은 末永隆甫; 松原四郎・吉澤友吉 編 (p. 203); 朱宗桓 (1984, p. 33)에도 제시되어 있다.

증하고, 巨視經濟學에서는 정부규제의 불가피성을 논증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오늘날 韓國의 現實經濟에 있어서 가격기구에 의한 效率的 자원배분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분야는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完全競爭模型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고 있는 農產物市場에 있어서도 채소가격이나 우유가격에 관해서마저 여러 가지 종류의 정부개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근자에는 국민경제를 伸縮價格 또는 價格調節部門(fluctuating-price or price adjustment sector)과 固定價格 또는 數量調節部門(fix-price or quantity adjustment sector) (전자를 신고전파적 경제부문, 후자를 케인즈적 경제부문이라고 한다)으로 나누고, 전자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원리가 적용되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풀·코스트가격원칙(full-cost pricing)이 적용된다고 보는 이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¹³⁾ 이것 역시 전술한 二元論的 經濟理論의 일종이라고 하겠으며,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을 수미일관된 이론체계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아직도 經濟學의 중대한 미해결의 장으로 남아 있다.¹⁴⁾

이 문제에 관하여 일부의 논자들은 경제학이 部分理論으로 족하고 일반이론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⁵⁾ 예컨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도 있다.

“현존하는 이론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부분이론인 것이다. (中略)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은 역시 부분이론뿐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부분이론이 일반이론으로 승화되고 양자가 整合性을 가졌을 때에 비로소 경제학은 科學性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찬성할 수 없다. 歷史上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學說들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부분이론과 일반이론이 수미일관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오늘날 韓國經濟學의 당면한 과제는 세계경제의 냉엄한 현실에 순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민족문화의 전통을 보존하고, 민족경제의 이익을 지켜나

13) Robinson (1973) (朱宗桓 譯, 『現代經濟學批判』, 一潮閣, 1979, p. 197); 森島通夫 (李基俊譯, 『無資源國의 經濟學』, 一潮閣, 1984, p. 37, p. 106).

14) Thurow (柳東吉譯), 前掲譯書, 第1章 등 참조.

15) 鄭暢永, “西歐經濟理論의 韓國經濟現實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정도에 관한 연구”; 『韓國經濟學의 摸索』, 韓國經濟學會編(1983, p. 196).

16) 邊衡尹, “韓國에 있어서 經濟學教育의 問題,” 上掲書, p. 266.

가면서 근로대중의 생활을 어떻게 향상시켜 나가느냐에 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신고전파경제학은 그것이 입각하고 있는 非歷史的方法論과 技術主義的・機能論的・辯護論的・코스모폴리탄적 시각 때문에 많은 制約性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新古典學派의 理論은 발족 당시에는 수미 일관된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를 확보할 수 있었고, 오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끈질긴 생명력도 J.M. Keynes에 의한 비판 앞에 한계에 부딪치고, J.M. Keynes의 거시경제이론의 부분이론으로 흡수되는 듯이 보였지만 그것은 끝내 흡수되지 못하고, 部分理論으로 남게 되었다. 앞으로의 경제학의 과제는 바로 부분이론으로 분해된 듯한 오늘의 경제학을 신고전학파의 二元論이 아닌 새로운 方法論에 의해 통합하고 체계화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전학과 경제학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그것들을 더이상 평론하지 않겠다. 그러나 韓國의 대부분의 신고전학과 경제학자들은 이들 비판을 거의 무시한 채 자기들의 학파의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려는 시도를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그러면서 현실의 경제문제를 解明하는 데 이미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종전의 이론을 大學講壇에서 되풀이함으로써 經濟學을 한낱 회사취직이나 관리로서의 입신출세를 위한 학문 정도로 타락시키는 데 일역을 담당해 온 것 같은 느낌마저 없지 않다. 오늘날 회사취직시험이나 각종 공무원임용고시에 출제되고 있는 경제학 관계 문제들을 보면, 대개 신고전학과 경제학 쪽에 偏重되어 있고, 그것도 실용성이 의심스러운 암기위주의 單答型 問題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같은 경향은 한국의 경제학을 타락시키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고 있는 매우 우려할만한 일이며, 그것을 是正하는 일이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신고전파경제학이 오늘날 韓國의 가장 지배적인 주류경제학이기 때문에 비판도 이 학파에 집중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렇기는 하나 新古典派經濟學은 경제의 본질적 구조분석에서는 Marx경제학에 뒤져 있지만, 經濟量 상호간의 數量的 함수관계를 여러모로 밝혀냄으로써 현실 경제의 분석을 통한 여러 가지 정책방향들을 제시함에 있어서 팔목할 만한 기여를 하였고, 그럼으로써 韓國의 經濟學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 제한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Marx경제학이나 制度學派 經濟學이나 Radical Economics 등에 의한 批判에도 겸허하

게 귀를 기울이고, 이들의 주장으로부터 취할 것은 취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韓國의 經濟現實과 Marx經濟學의 問題點

한국의 경제현실을 분석하는 非主流經濟學的 視角으로서의 Marx경제학적인 것과 制度學派的인 것, 최근에는 構造主義學派的인 것, 프랑스의 Regulation학과적인 것¹⁷⁾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이것들을 일일이 거론할 여유가 없으므로, 80年代에 들어와서 특히 新進氣銳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개척되어 가고 있는 Marx경제학적 시각의 문제점을 간략하게 언급해 두고자 한다.

현재 Marx경제학은 심각한 시련과 반성을 강요받고 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Marx-Lenin의 이론을 바탕으로 人類歷史上 처음으로 수립된 共產主義를 지향하는 社會主義國인 소련과 동구의 위성국들이 심각한 경제적 危機에 직면한 끝에, 80년대말로부터 90년대초에 걸쳐 급격하게 市場經濟原理와 자본주의적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당면한 經濟的 難局들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에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을 Marx경제학의 실패라고 보는 시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Marx경제학의 실패라기보다는 中央集權的 「官僚獨占社會主義」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원래 Marx 자신이나 Lenin마저도 社會主義가 반드시 中央集權的 官僚獨占的 計劃經濟여야만 한다고 주장한 일은 없었다.

공산주의의 이념은 資本主義社會에서의 搾取와 人間疎外를 극복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신장시키려는 것이었고, 共產黨의 원래 이념도 자유로운 개인의 聯合社會의 건설을 지향하고 있었다. 소련 공산당이 1917년의 10월혁명에서 인민의 지지 속에서 정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도 공산당의 그러한 이념이 인류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할 수 있다고 믿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이념과는 반대로 소련에서 독재적인 一黨支配體制가 구축된 것은 그만한 歷史的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공산당은 勞動者·人民의 前衛黨임을 자처하면서 전쟁반대와 搾取없는 社會의 주장과 그 실천에 있어서

17) 平田清明 (1989).

헌신적인 용기와 과학적인 信念과 展望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망을 얻을 수 있었다. 둘째로 자본주의사회의 矛盾을 극복하고 社會主義經濟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였다. 셋째로 戰爭의 시대와 戰後復興의 시대에는 인민의 힘을 한군데로 결집시킬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한 간편한 수단은 관료적 지배였다. 넷째로 생산수단의 私的 所有를 지양하고 國有化에 의한 생산수단의 社會化를 실현하려고 할 경우, 국가에 의한 經濟의 計劃化가 불가피하게 되는데, 좋은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은 限定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능력의 한계를 은폐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서 공산당의 절대적인 권위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黨의 獨占的 支配를 필연화했던 위의 여러 가지 역사적 理由는 동시에 共產黨 자신을 좀먹는 원인으로 되었으며, 黨의 내부붕괴의 조건을 형성하였다. 戰時體制와 戰後的 復興過程에서는 많은 당원들에게 헌신적 봉사를 추구하고, 당원들도 인민에 대한 선의의 헌신만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平時體制로 바뀌게 되자, 黨員들 사이에는 개인적 영달과 승진, 인민에 대한 봉사보다는 사리와 사욕이 고개를 쳐들게 되었다.¹⁸⁾ 이 때문에 공산당의 사상적·정치적 타락이 나타나고, 黨의 위신 저하와 人民으로부터의 이탈, 獨裁를 위한 獨裁者로서의 이미지 고착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共產黨은 이른바 민주집중제를 내걸고 그것이 黨內民主主義라고 주장하여 왔지만, 그것은 가식에 불과했고, 당내의 소수의견은 民主集中制의 이름 밑에 말살되기 일쑤였고, 언제나 당의 최고지도자인 1개인의 결정이 당의 이름으로 관철되었다.

이와같은 체제 아래서 共產黨이 계속 人民의 支持를 받는 政黨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공산주의의 높은 이상을 견지하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봉사심에 불타는 黨員들을 계속 확보해야 하며, 그들이 인민의 사표로서 사리·사욕에 물들지 않는 엘리트로 남아 있어야 한다. 둘째, 인민의 의식구조 속에서 자본주의적 사리사욕을 몰아내고 社會에 대한 봉사, 이웃에 대한 동포애야말로 인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인민의 머리 속에 침투시켜야 한다. 즉 共產主義的 人間改造 없이는 共產主義體制의 維持와 존속은 불가능하다.¹⁹⁾

18) 盛田常夫 (1990).

19) 北韓의 金日成體制가 다른 共產圈諸國의 動搖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요지부동하게 보이는 것은 인민을 主體思想으로 洗腦하고 그들의 열정을 金日成 개인에 대한 崇拜로

이와같이 본다면 근자에 소련·동구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신 추락은 공산주의사상의 실패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共產黨의 戰術的 失敗에서 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들의 실패는 주로 인민을 共產主義的 人間으로 改造하는 데 실패하는 가운데, 資本主義社會에 범람하고 있는 생활물자와 똑같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 즉 그들의 사리사욕을 최대한 만족시켜주는 것이, 共產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었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단순히 생활물자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일은 해도해도 끝이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資本主義的 方法을 통해 훨씬 더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官僚化된 中央計劃經濟를 통해서 그것과 똑같은 일을 수행하려고 한 데서 소련과 동구권 공산당의 失敗의 根源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서로 연대감과 공감을 지니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느끼느니보다, 남보다도 더 풍부한 물질적 욕망의 충족에 의해서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본주의적 인간이 지배적인 社會에서는 共產主義가 발붙일 곳은 없을 것이다. 이와같은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당원과 인민을 共產主義思想으로 세뇌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내 실패하고 만 것이다. 필자가 그들의 失敗를 사상의 실패라기보다 戰術的 失敗라고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Marx주의경제학은 자본주의사회를 영구불변의 經濟體制라고 보았던 고전파경제학을 批判하고, 唯物史觀의 입장에서 역사발전의 법칙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原子論的인 孤立的 個人觀을 비판하고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일정한 사회경제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剩餘勞動의 존재형태가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직접생산자와의 사회경제적 관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혀냈다. 나아가서 古典派經濟學이 정립시킨 勞動價値說은 나아가서 일상적인 價格現象 뒤에 그 本質로서의 가치, 즉 노동의 투하량이 있다고 보고, 가격과 가치의 관계를 現象과 本質 사이에 존재하는 辨證法的 關係라고 보았다. 그럼으로써, 자본주의사회에서 노임·이윤·지대 등 모든 소득의 근원이 근로자의 노동의 소산이며, 이윤과 지대 등이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잉여노동의 결과로써 얻어

集中시키는데 成功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北韓이 對外開放에 한사코 부정적인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것도 開放 이후에 인민의 대다수가 資本主義社會의 基礎理念인 개인의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어져, 이제까지 닦아왔던 思想教養이 黃金의 매력 앞에 一時에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다.

지는 剩餘價值에서 지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착취의 존재를 부인하는 신고전파의 限界生産能力說과 이것에 입각하는 변호론적 이론을 배격하는 것이었으며, 인간에 의한 인간의 搾取에 입각하는 人間疎外를 止揚하고, 자유로운 개인의 민주적 聯合社會의 도래를 전망하는 사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은 수많은 추종자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급기야는 광대한 領域을 가진 공산권의 지배이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Marx의 경제학은 現象의 분석보다는 本質의 탐구 쪽에 중점이 두어져 있는 이론이었다. 그것은 Marx가 살고 있던 당시의 경제이론이 現象에 집착한 나머지 本質을 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였기 때문에 우선 그와 같은 그릇된 이론을 바로잡는 일이 급선무였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그 과정에서 Marx의 經濟學은 本質分析에 치우치게 되었고, 현상 상호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法則性的 탐구는 副次的인 것으로 보는 방향으로 기울게 되었다. 또한 Marx에 추종하는 經濟學者들도 그와같은 偏向을 답습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오늘날 Marx경제학은 자본주의경제의 本質分析의 분야에서는 新古典派經濟學의 추종을 불허하는 업적을 쌓아왔지만, 現象分析의 分野에서는 거꾸로 新古典派經濟學이 Marx경제학을 능가하는 업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것도 Marx경제학의 위와 같은 특징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Marx경제학의 그와 같은 偏向은 이론의 영역에만 그치지 않고, 現實적으로 오늘날의 소련·동구권의 官僚獨占社會主義體制의 파탄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자본주의사회의 本質的 基礎는 생산수단의 私有制와 利潤追求의 自由에 있기 때문에, 모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고 자본가와 地主를 일소하면 나머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生産手段을 國有化하고 中央集權的 計劃經濟를 시행하였지만, 그것은 사실상 자본가의 자리에 共產官僚를 대신 앉혀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자본에 의한 노동자의 착취가 止揚된 것도 아니었고, 人間疎外의 문제가 해소된 것도 아니었다. 그 체제는 공산관료가 점차 革命的 熱氣로부터 利己的 打算에 물들게 되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인간은 원래 지질적인 본성과 하이드적인 본성을 다같이 지니고 있는 동물이다. 인간은 利己心에 끌리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보존과 이익을 위해 이웃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 連帶意識 내지는 利他心を 지니며 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는 利他心에 의

거한 사상이고, 資本主義는 利己心에 의거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利他心과 利己心이 서로 별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듯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도 서로 절대적 對立關係에 있는 것은 아니다. 社會主義는 資本主義의 利潤동기의 部分的인 수용없이는 활성화될 수 없으며, 자본주의 역시 사회주의적 要素의 도입없이 자체 내의 矛盾을 극복할 수 없다. 共產黨의 失敗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社會經濟의 모든 분야를 국유화하고 그것을 官僚制的으로 통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非民主性和 非效率性和 부패가 만연되기 일쑤다.²⁰⁾ Marx의 『資本論』의 어느 구석을 읽어보아도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하고 자본가를 모두 없애야만 사회주의가 실현된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株式會社制度의 발전과 생산의 集中化가 생산의 社會性을 높임으로서 생산수단의 社會化가 용이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다.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했다 한들 노동자들이 자기가 새로이 창출한 가치를 전부 차지해 갈 수는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노동의 착취는 지양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生産手段을 모두 국유화해야 할 필요는 없다. 株式會社制度가 발달된 오늘의 상황 아래서는 근로대중이 각 기업체의 주식을 나누어 갖고 경영에도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업체의 소유자가 되고, 그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한 經營者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이들을 감사하는 것도 一種의 「社會主義」라고 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協同組合이나 어떤 종류의 공동체가 기업을 소유·경영하거나, 기업체의 주주로 되는 경우도 일종의 「社會主義」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計劃經濟는 戰時나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 취하게 되는 하나의 경제운영방식이다. 그것은 전이나 준전시에 자본주의국가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經濟運營方式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사회가 반드시 計劃經濟로 되어야 할 必然性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요컨대 Marx經濟學은 經濟學의 理論面에서, 특히 本質分析의 分野에서, 신고전파보다는 훨씬 심오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本質을 담아낼 현상에 관한 理論을 제대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소련·東歐圈에서와 같은 失敗作을 연출하고 만 것이다. 그들은 특히 人間疎外問題를 해결하는 방안에 있어서 결정적

20)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Weber (1968, p. 223); Do, *Gesammelte Politische Schriften*, München, 1921, Quoted in Richard Pipes, "Max Weber and Russia," *World Politics* 7, Apr. 1955, p. 377.

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Marx경제학은 「商品」의 분석에서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원초적으로 상품의 소유자로 나타나게 되는 血緣共同體와 그 안에서의 인간의 存在樣態의 탐구로부터 시작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럼으로써만이 인간의 本質的 屬性을 밝혀낼 수 있고, 인간의 本質과 그것이 자기를 나타내게 되는 현상을 보다 수미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V. 韓國經濟學의 課題：結論을 代身하여

위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경제의 現實을 올바르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길을 올바르게 제시해 주는 經濟理論은 아직도 우리에게 充分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新古典派는 그것대로 問題性을 갖고 있는가 하면 Marx經濟學도 나름대로의 問題性을 갖고 있다. 필자는 어느 한 쪽이 전적으로 옳고 다른 한 쪽이 전적으로 옳지 않다는 식의 편협한 견해에 동조하고 싶지 않다.

과거에 필자는 價値와 價格이라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관해서, 노동가치설과 신고전학파의 生産費說, 나아가서는 費用函數分析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으로 승화시킬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것을 역설한 바 있다.²¹⁾ 그렇게 된다면, 勞動價値學說은 경제의 본질과 구조의 분석면에서 그 진면목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新古典學派의 經濟學은 경제의 現象的・機能的 분야에 관한 분석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였다. 필자는 나아가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평화공존의 시대에 있어서 이 兩體制의 平和的인 경쟁을 통한 공존공영의 길도 이와같은 方法論的 立場에서 비로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와같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한국경제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각 분야의 經濟學者들이 겸허한 자세로 서로 돕고 비판하며, 일단 비판이 제기되면 여기에 성실하게 대응하고 답하는 학문적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비판이 없는 곳에 發展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진정한 批判과 反批判의

21) Chong Hwan Chu, "A Comparisoh of Neo-Classical Price Theory with the Theories of Labour Value," 『經濟學研究』, Vol. 25, 韓國經濟學會, 1977; 朱宗恒(1977, pp. 200~204; 1987, pp. 233~237).

慣行은 한국경제학이 더욱 發展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제조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비판이 提起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또 자기의 주장과 관련된 研究業績이 이미 나와 있고 또 그것을 분명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쓴 論文이나 著書 속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 態度는 止揚되어야 한다. 이것으로써만이 韓國經濟學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韓國經濟學會는 美國의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와 같은 서평전문지의 잡지를 출판사와 협력하여 출판함으로써 경제학자 相互間의 批判과 反批判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누가 무슨 論文을 발표하였는가, 어떤 博士學位論文이 나왔고, 審査委員은 누구누구였으며, 그 內容과 水準은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媒體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한국경제학의 發展을 가로막고 있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둘째로 大學은 어떤 특정학과에만 치우친 경제학 강의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新古典學派에 偏重된 經濟學만이 가르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가지고서는 전환기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경제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 農業問題나 勞動問題에 대하여 신고전학파의 理論이 흔히 무력함을 노정하고 있는가 하면, 경제의 기능분석이나, 經濟의 현상적 동향분석에 대해서 마르크스경제학은 역시 거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양쪽을 통합하는 이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共產圈과 수교하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지도이론으로 되어 왔던 마르크스경제학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새로운 전환기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각 학파는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고, 서로 배우고 서로 補完하는 입장에 서야 할 것이다. 經濟理論의 궁극적인 적합성을 최종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은 그 이론이 얼마만큼 현실을 科學的으로 分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경제학이 經驗科學인 한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리고 그러한 과제는 수미일관된 本質論과 現象論의 統一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결코 일부 논자가 주장한 바 있듯이 부분이론의 접합이어서는 안된다.

셋째로 한국의 경제학자가 다같이 명심해 두어야 할 것은, 자기의 經濟學研究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經濟學은 國民富에 관한 과학이었으며, 貧困追放에 관한 학문이었다.

Max Weber의 沒價値性論이 나온 이후에, 경제학을 하나의 技術學으로 변질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으나,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학의 타락을 가져오는 위험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그것은 마치 原子物理學者나 原子工學者가 인류의 대량살상무기제조에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의 단순한 제공이므로 합리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는 언제나 자기의 연구와 주장이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국민부를 궁극적으로 창조해주고 있는 勤勞大衆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깊이있게 성찰해야 한다. 예컨대 血族財閥의 지배로부터 국민경제를 해방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오늘의 한국경제의 상황 아래서, 政府規制의 무차별적인 철폐, 즉 民間主導經濟의 실현을 주장하게 되면, 그러한 주장이 결과적으로 血族재벌의 이익을 보호해 주고, 근로대중의 權益에 排馳되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로 韓國經濟學은 經濟學 歷史에 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경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흔히 經濟學 歷史上 이미 밝혀진지 오래된 문제를 가지고 알가알부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와같은 비생산적인 시간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도 경제학의 발달과정에 관한 깊은 성찰은 필수불가결하다. 경제학의 교과목을 學部段階에서는 되도록 각 학과별에 따라 세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예컨대, 古典派經濟學, 新古典派經濟學, 마르크스經濟學, 歷史學派와 制度學派 등으로 세분화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것이 勞動經濟學, 國際經濟學, 微視經濟學, 巨視經濟學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한국경제학은 좀더 한국역사와 현실에 뿌리를 박은 實踐的 科學으로서의 진면목을 나타내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면에서 근자에 한국경제학은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였다고 본다. 이제 우리는 일반론의 단계를 넘어 세부적인 韓國經濟의 現實을 깊이 파고들어, 特殊性을 바탕으로 일반론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심화시켜야 할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논쟁보다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경제여건을 개혁하여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대중에게 보다 나은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면, 예컨대 農業의 구조개혁은 어떠하여야 하며, 勞動組合은 어떠하여야 하며, 特定產業의 구조는 어떻게 개혁되어야 하는가를 韓國經濟의 현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연구의 과정에서 자본주의에

서는 무엇을 취하고 사회주의에서는 무엇을 취하고, 각 학설에서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를 究明해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제 一般論의인 論議의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앞서 말한 바 있지만, 한국경제학은 한국경제를 올바르게 分析하고, 韓國民에게 복된 삶을 보장해 주는 길이 무엇인가를 제시해주어야 할 무거운 責務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민족적 利益을 守護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한 학문이 아니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국적있는 학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韓國經濟學界에는 무국적적인 主張을 펴는 코스모폴리탄적 경제학자가 상당수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솔직한 느낌이다. 한국경제학은 國籍을 되찾고, 民族經濟의 自主와 自立을 지향하는 학문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경제학계의 발전에 뒤지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국내에서의 經濟學研究의 성과에 대하여 언제나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특히 研究論文 등에서 參考文獻에 外國文獻들은 나열하면서, 국내문헌들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것만 몇 가지 제시하는 정도로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韓國經濟學이 國籍있는 경제학이 되려면, 이와같은 경향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같은 전제 위에서 우리나라 경제학도 되도록 英文으로 번역된 연구성과들을 많이 발표하여 世界經濟學界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손색이 없는 學問의 水準을 이루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課題들을 제대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論文의 서두에서 말한 바 있듯이,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制度的 장치의 마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위에 말한 것들 이외에도 전환기에 처한 한국경제학의 課題에 관하여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만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를 나열하였지만, 필자 자신이 위와 같은 韓國經濟學의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얼마만큼 공헌했느냐고 自問해 볼 때,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그러한 筆者가 여기에 감히 한국경제학의 課題에 관해서 여러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학회측의 간곡한 요청에 의한 것임을 끝으로 辨明삼아 밝혀두고자 한다. 기탄없는 批判을 바라고 싶다.

參 考 文 獻

1. 金俊輔, 『經濟學基礎論考』, 高麗大學校 出版部, 1986.
2. 柳東吉 譯, 『現代經濟學의 新潮流』, 著者: Lester, C.T., 우아당, 1986.
3. 李基俊 編, 『韓國經濟學會發達史』, 一潮閣, 1980.
4. 李基俊 譯, 『無資源國의 經濟學』, 一潮閣, 1984.
5. 朱宗桓, 『經濟學概論』, 一潮閣, 1977.
6. _____, 『經濟原論』, 一潮閣, 1987.
7. _____, “比較優位論의 適用限界: 韓國産業의 경우,” 『經濟學研究』, 第27集, 韓國經濟學會, 1979.
8. _____, “自由貿易帝國主義論에 관한 小考,” 『經濟學 研究』, 第30集, 韓國經濟學會, 1982.
9. _____, 『財閥經濟論』, 正音文化社, 1984a.
10. _____, 『韓國的 經濟學』, 正音文化社, 1984b.
11. 朱宗桓 譯, 『現代經濟學批判』, 一潮閣, 1979.
12. 韓國經濟研究院 編, 『韓國經濟學의 模索』, 韓國經濟研究院, 1983.
13. 韓國經濟學會, 『經濟學研究』, 第25, 27, 30集.
14. 末永隆甫, 『近代經濟學の危機』.
15. 松原四郎・吉澤友吉 編, 『歷史派經濟學と近代經濟學』.
16. 盛田常夫, “歷史的過渡期の共產黨,” 『經濟評論』, 日本評論社, 1990. 1.
17. 日本評論社, 『經濟評論』, 1989. 2. /1990. 1.
18. 平田清明, “資本と國家,” 『經濟評論』, 日本評論社, 1989. 2.
19. Bell, D. and I. Kristol (eds.), *The Crisis of Economic Theory*, 1981.
20. Dobb, M., *On Economic Theory and Socialism*, 1955.
21. Gallargher, J., and R. Robinson, “The Imperialism of Free Trade, 1815~1914,” *Economic History Review, Second Series*, 4, 1953~4.
22. Hutchison, T.W., *The Politics and Philosophy of Economics: Marxians, Keynesians and Austrians*, Basil Blackwell, 1981.
23. Robinson, J., *An Introduction to Modern Economics*, London: McGraw-Hill, 1973.

24. _____, "The Second Crisis of Economic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1972.
25. Robbins, L., *The Theory of Economic Policy in English Classical Political Economy*, 1952.
26. Weber, M., *Economy and Society* ; Roth, G., and C. Witlich, (eds.), New York: Bedminister Press, 1968
27.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1972.